

민주, 사법리스크와 별개... '김건희 특검법' 화력 집중

尹 거부 시 28일 재표결... 박찬대 "관철될 때까지" 사법부 겨냥한 대응 신중... 검사 탄핵은 속도 조절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 28일 재표결하겠다는 방침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는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비판이 쏟아졌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법" 거부는 윤석열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국민께서도 포기하지 않겠지만, 민주당도 관철될 때까지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거부권으로 시간을 끌어도 죄는 사라지지 않는다"며 "검사 출신인 윤 대통령이 특검 칼날의 예리함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피하고 싶겠지만,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특검법 추진 동력이 약화할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특검법은 별개의 문제"라며 "특검법을 바라는 여론이 압도적 다수인 만큼 예정대로 28일 분회의에서 재표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검에 찬성하는 국민의 여론을 등에 업고 대어 투쟁 수위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박지원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70~80%의 국민이 '김건희 특검'을 찬성하기 때문에 (대어) 투쟁의 수위를 올려서 (윤 대통령) 퇴진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사법부를 겨냥한 대응에는 신중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박 의원은 라디오에서 "우리의 주적은 사법부가 아니므로 사법부를 공격하는 분위기는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김 여사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등의 사유로 추진하려 했던 검사 탄핵의 속도 조절에 나선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당내에선 28일 분회의에서 이상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 처리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종근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8일 검사 탄핵을 추진하나"라는 물음에 "그 얘기는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28일 분회의에서 검사 탄핵안을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운데)가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을 살리기 신문고 상생 꽃 달기' 행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민생·정책 행보 '시동'

민생특위 출범 준비... 각종 정책토론·간담회 참석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민생·정책 행보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판결을 기점으로 '대어 투쟁' 모드로 전환한 야당과는 거리를 두고 외연 확장에 나서려는 모습이다.

당 관계자는 19일 "가칭 민생특별위원회 출범을 준비 중"이라며 "임대료 문제 등 실제 삶과 직결된 문제들을 살펴보고 정책으로 해법을 내놓겠다는 구상"이라고 전했다.

앞서 한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의 모두발언에서도 "이재명 대표 재판 이슈도 있지만 저희는 민

생이 우선"이라고 강조하며 '민생 행보'를 예고한 바 있다.

한 대표는 이르면 이번 주 출범하는 민생특위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현장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아울러 각종 정책 이슈에도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한국노총과 간담회를 갖고 정년 연장 등 노동정책 의제를 논의한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관련해 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 등이 주최하는 정책토론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전날에는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대출금리

하향, 육아휴직 및 파견근로 지원 등 중소기업에 지원책을 약속했다.

한 대표의 민생·정책 행보는 민주당과의 차별화를 꾀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이 대표의 1심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 이후 사법부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린 민주당에 정적으로 맞서는 대신 정책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계획이다.

한 대표 측 관계자는 "정면 대결을 하기보다 '아웃박스' 전략을 구사할 때라는 판단"이라며 "야당이 정쟁에 몰입할 동안 여당은 할 일을 한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에게 당초 정치권 예상보다 무거운 행이 선고되면서 이른바 '반사이익'을 기대하고 자칫 낙관적으로 흐를 수 있는 당내 분위기를 다잡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연합뉴스

친윤 "尹대통령 부부 비방글 진상 규명해야"

한동훈 가족 명의 글 논란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계 인사들은 19일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 논란'과 관련해 신속한 진상 규명을 거듭 촉구했다.

친윤계는 당원 게시판에 한 대표 가족 명의로 올라온 비방글을 이들이 직접 쓴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4일 의원총회에서도 당무감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권성동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당정, 당내 화합을 위해 하루빨리 당무감사로 밝혀야 한다"며 "한 대표 가족 명의가 도용된 것인지, (게시글 작

성이) 사실인지에 대해 한 대표가 진실을 말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한 대표 가족이 쓴 글로 확인될 경우 "한 대표가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할 부분은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금방 해결될 수 있는 간단한 문제 때문에 우리 당 내부에서 불필요한 혼란이 커지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며 "한 대표 가족이 쓴 글인지 아닌지를 밝히기만 하면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당원 진상 확인이 법을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친한(친한동훈)계의 입장에 대해서는 "당

적 관리주체인 지도부가 논란의 진상 규명을 위해 당무감사를 하는 것은 법을 위반이 될 수 없다"며 "당이 자체적으로 조사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왜 외부 수사기관에 의존해 해결하려고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장여찬 전 청년최고위원은 BBS 라디오에서 "한 대표 가족이 윤 대통령 부부 비방글을 수백개 이상 남긴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자주 사건을 덮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반면, 친한계인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KBS 라디오에서 "진짜 본인들이 썼는지는 수사 결과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논란을 수사 중인 경찰은 최근 당 사무처에 게시판 서버 자료를 보존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

"명태균, 8년 전 '여론조사 조작' 과태료 전력"

양부남 의원 "표본 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8년 전 국회의원 총선에서도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 국회의원은 "경남 진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을 앞둔 2016년 2월 명씨가 운영하던 여론조사업체 좋은날리서치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좋은날리서치가 2016년 1월 12일 경남 진주시 갑·을 선거구인 2273명을 대상으로 국회의원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위법 사안을 적발해낸 것이다.

명씨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2017년 5월 선관위의 처분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명씨 업체의 여론 조사가 세 가지 위법 사항이 있다고 봤다.

응답자 표본을 조작해 결과를 왜곡했고, 질문 순위를 정할 때 현역 국회의원을 제일 앞으로 배치해 편향된 응답을 유도했다.

또 특정 연령대에 법에서 허용하는 수준 이상의 가중치를 부여해 여론조사 결과가 반영했다고 판단했다.

양부남 의원은 "여론조사 조작이나 왜곡은 유권자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며 "명태균의 여론조사 방식이 타선거에도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매우 커 검찰의 명명백백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창호(샷시)교체

MD MODERN **모던건설**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창 광주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